



기금 확대·AI대응 위해 지역신문 연대 강화 필요

신문협회, 지역신문 경영혁신 전략 세미나 개최

신문협회가 주최한 지역신문 경영혁신 전략 세미나가 지난 10일 전주 우석대학교 본관 2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문협회 지역회원사 발행인 19명이 참석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효율적 지원 방안

〈1주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효율적 지원 방안’ 발제를 맡은 조상진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계획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효율적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지역신문은 지역 정보 제공·지방권력 감시·지역 공동체 유지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경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다각화된 재원 구조 없이는 지역신문의 공적 역할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은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20년간 지원해 왔음에도 지역소멸과 맞물려 지역신문의 어려움이 지속되



10일 열린 신문협회 지역신문 경영혁신 전략 세미나에서 회원사 발행인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고 있는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 확대를 통한 건전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신문 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광고의 일정 비율을 지역신문에 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자가 구독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아 지역신문에 사용하는 ‘미디어 바우처’ 도입과 지역신문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끝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지역신문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미디어시장의 변화와 지역 언론 혁신 전략

〈2주제〉 ‘세계 미디어시장의 변화와 지역 언론 혁신 전략’ 발제를 맡은 우승호 서울경제신문 미래전략

부 부국장은 올해 6월 세계신문협회(WAN-IFRA) 연차총회에서 발표된 해외 지역언론의 도전과 성과 요인을 소개했다.

우 부국장은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신문협회 27개 지역 회원사 홈페이지의 AI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AI 관련 기능과 서비스를 12항목으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27개사 모두 과거 기사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

다. 그는 “지역신문이 AI나 디지털 혁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7개사 모두 이미 각자의 기사 아카이브를 갖고 있으며, 이는 가장 확실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사 검색 기능에 AI 검색을 추가한 곳은 1곳으로, 아카이브를 활용한 AI 서비스 개발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사의 AI 원칙을 마련한 곳은 9곳, AI의 뉴스 이용 조건을 안내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우 부국장은 “현재 지역신문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 부족이 아닌 공동협력 부족”이라고 말한 뒤, “‘지방의원 공약 데이터’, ‘신문사 공동 AI 윤리원칙’ 등을 지역신문이 함께 추진할 경우, 강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우 부국장은 “지역신문이 AI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료 전환, AI 기사자동화 같은 큰 변화보다 작은 실험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광고 대행기관 이원화는 공익성·효율성 저해”

신문협회, 문체부에 ‘정부광고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전달

신문협회는 지난 8월 27일 정부광고 업무수탁기관을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로 이원화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기현 의원이 8월 18일 대표발의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시 방송통신매체 정부광고 업무는 코바코가 담당하

고,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과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정부광고 업무수탁 기관을 언론재단과 코바코 양 기관으로 규정할 경우, 정부광고 관리·운영이 문체부와 코바코를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된다는”며 “이는 정부광

고법의 제정 취지인 공익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종합적인 광고 집행(미디어 믹스 광고 전략)을 어렵게 해 정부광고주의 불편을 초래하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광고주는 광고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을 혼용하여 사용한다”며 “정부광고 이원화의 경우, 매체별로 양 기관(언론재단·코바코)에 개별 의뢰해야 하며

매체별 수수료도 따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코바코가 SBS, 종편 방송사 등 다른 방송매체와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점도 우려했다. 방송광고판매 독점권한을 갖고 있는 코바코가 정부광고 수탁기관이 될 경우, 독점판매대행을 담당하는 매체에 정부광고를 집행하도록 정부광고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광고 대행기관 이원화 시, 언론진흥사업 예산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협회는 “정부광고 수수료는 △언론진흥기금 출연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언론지원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대행기관이 이원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경사 추석연휴 3~4일간 휴간

신문협회 재경 26개 회원사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 3~4일간 휴간한다.

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

보·매일경제·서울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중앙일보·코리아타임스·파이낸셜뉴스·한겨레·한국경제·

한국일보 15개사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휴간한다.

내일신문·대한경제·머니투데이·문화일보·브릿지경제·스포츠

서울·스포츠조선·아시아경제·아주경제·전자신문·헤럴드경제 11개사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휴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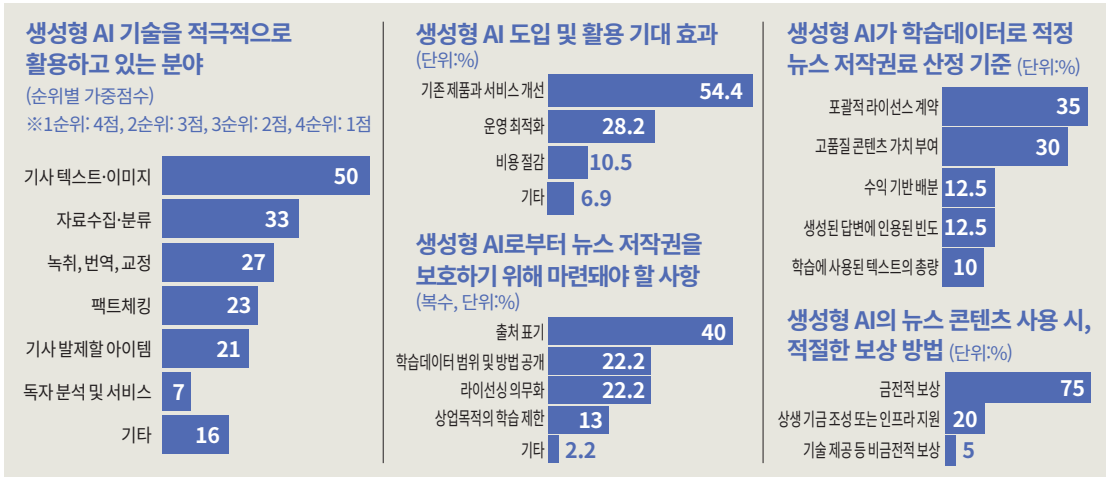
신문사 95%, 생성형AI 활용 중이거나 도입 검토

신문협회 회원사 열 곳 중 여섯 곳은 생성형 AI 기술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사 텍스트·이미지 생성’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문협회가 회원사 대상으로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한 ‘생성형 AI 활용 현황 조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는 20개사(재경 10개사, 지역 10개사)가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사의 60%(12개사)가 현재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도입할 계획이거나 검토 중’이라는 응답은 35%(7개사)로 집계됐다.

현재 운영 중인 생성형 AI 방식(복수 응답)으로는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 및 상용 AI 솔루션 이용’이 15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 언론사·기관과 공동 개발 및 이용’(6개사), ‘자체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운영’(5개사) 순이었다. 생성형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야는 ‘기사 텍스트 및 이미지 생성’(50점)을 꼽았다. 이어 ‘자

신문협회 20개 회원사 ‘생성형 AI 활용 현황’ 조사 결과 인력·비용 부담은 과제로



료 수집 및 분류’(33점), ‘팩트체크’(27점) 순이었다.

“업무 개선 효과” 긍정적…인력 부족·도입 비용은 부담

생성형 AI 도입 및 활용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복수 응답)으로는 ‘숙련된 인력 부족과 채용 어려움’(20.9%)과 ‘도입 및 개발 비용 부

담’(20.9%)이 공동 1위에 올랐다. 이어 ‘도입 이후 성과 창출의 불확실성’(14.6%), ‘법적 책임 및 윤리 문제’(14.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대 효과로는 ‘기존 제품 및 서비스 개선’(54.4%), ‘신문 제작 및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28.2%), ‘비용 절감’(10.5%) 등이 언급됐다. 실제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

의 62.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보통’은 31.3%, ‘그렇지 않다’는 6.3%였다.

AI를 도입한 신문사 중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곳은 55.6%, 그렇지 않은 곳은 44.4%로 나타났다.

뉴스 저작권 보호 위해 출처 표기 의무화 시급

생성형 AI로부터 뉴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책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출처 표기 의무화’(40%)가 가장 높았고, ‘학습 데이터 범위 및 방법 공개’(22.2%), ‘라이선싱(뉴스 사용료 지급) 의무화’(22.2%)가 뒤를 이었다.

생성형 AI가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적정 뉴스 저작권료의 산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35%)과 ‘심층 보도 등 고품질 콘텐츠에 별도 비용 지급’(22.2%)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생성된 답변에 인용된 빈도’(12.5%)와 ‘수익 기반 배분’(12.5%)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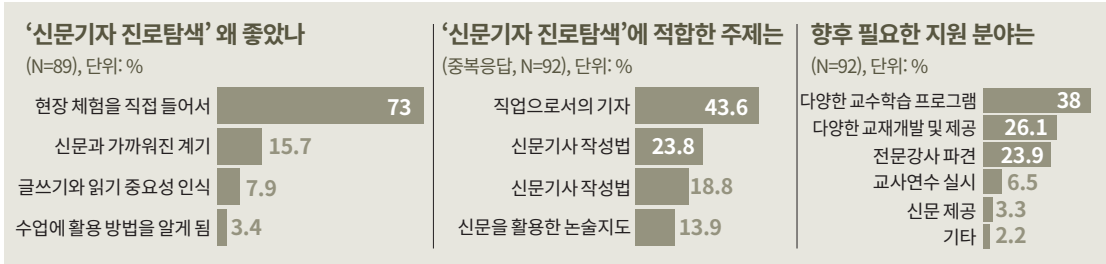
학습 데이터 활용에 따른 적절한 보상 방법으로는 ‘금전적 보상’이 75%로 압도적이었으며, ‘상생 기금 조성 및 인프라 지원’(20%)이 그 뒤를 이었다.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9.5%가 ‘신문협회 등을 통한 공동 대응’을 꼽아, ‘개별 협상’(5.3%)을 크게 앞섰다.

‘신문기자 진로탐색’ 참가 교사 96.7% “유익”

신문협회가 주최하는 ‘2026 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교사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기자 진로탐색’은 신문협회 회원사 기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직업으로서의 기자 △신문을 활용한 진로탐색 △신문제작 과정 및 기사 작성법 등을 주제로 수업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20개 학교에서 진행된다.

협회가 9월 8일 기준 이번 프로그

92명 대상 설문조사…“현장체험 이야기 도움”



램에 참여한 92개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9명(96.7%)이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가장 유익한

점으로 △신문 기자들의 현장체험 경험을 듣게 된 점(73%)을 꼽았다.

이어 △학생들이 신문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점(15.7%) △학생들이 글쓰기와 읽기 중요성을 알게 된 점(7.9%) 순으로 답했다.

교사들은 수업에 가장 적합한 주제로 △직업으로서의 기자(43.6%)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신문기사 작성법(23.8%) △신문 제작 과정(신문사 견학 포함, 18.8%) △신문을 활용한 논술지도(13.9%) 등이 뒤를 이었다.

AI 시대 ‘고품질 콘텐츠·팩트체크 기능 강화’로 대응

신문협회 산하 경영지원협의회(회장 장철환 서울경제 이사)는 지난 4일 용평 드래곤밸리호텔에서 ‘2026 언론산업 성장 추세와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현우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2026 언론산업 5대 주요 이슈(표)를 제시한 후, “IT플랫폼이 빅테크 의존에서 탈피하는 추세”라며 “심도 있는 비평·압도적 콘텐츠 등으로 독립



지난 4일 용평 드래곤밸리호텔에서 이현우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이 ‘2026 언론산업 성장 추세와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6년 언론산업 5대 주요 이슈
1 주간 AI 이용자 10억 명 시대의 플랫폼 변화
2 AI 인프라 시대: AI가 뉴스 유통 방식을 바꾸는 3대 축
3 매체보다 개인을 더 신뢰하는 크리에이터 시대
4 딥페이크와 정보 오염의 시대, 진위성 검증
5 AI 라이선싱 시장의 정체와 무너진 기술 장벽

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한다면 결국 독자는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뉴스 유통 방식을 바꾼 원인으로 ①AI와의 대화로 정보를 얻는 ‘대화형 소비 전환’ ② 클릭 트래픽이 소멸된 ‘검색 경로 무력화’ ③ 기사를 고유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로 인식하는 ‘고유 정체성 소실’을 꼽았다.

그는 “이제는 정형화된 언론사가 아닌 개인 저널리스트를 신뢰하는 시대”라며, “미래의 언론사는 저널리스트가 본연의 사회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백업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 선임연구위원은 “정보 오염의 시대 속 팩트체크를 위해 전사적 대응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진위 조사 전담 프로세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언론사 공공 AI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산 NPU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대한민국 언론 100년 DB AX 전환’ 간담회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1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언론사들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사·사진·영상·음

최형두 의원 ‘대한민국 언론 100년 DB AX 전환 간담회’서 강조

성 등의 자료를 클라우드 기반 AI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최 의원은 “대한민국 언론사는 수십년 간 축적해 온 방대한 DB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AI시대의 핵심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

사가 보유한 양질의 공공 콘텐츠에 합리적인 비용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전환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공공 AI 클라우드를 마련하고 신문사, 방송사 등이 공동 이용하면 개별 언론사에 예산·장비를 각각 지원하는 방식보다 비용 절감, 장비 활용성 증가와 같은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매일경제 고성준 디지털미디어전략국 국장은 “신문사와 방송사는 데이터의 특성과 활용 방식이 다르다”라며 “신문사가 공동 클라우드에 참여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을 위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신한수 전략기획부 부국장은 “공동 클라우드는 단순한 저장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언론사 간 데이터 공동 활용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 기업의 뉴스 데이터 활용에 대응한 저작권 보호·공동 협력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美 캘리포니아주, 5년간 지역 언론인 고용 시 세제 혜택 추진

‘커뮤니티 뉴스법’ 상·하의원 통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의회가 지역 저널리즘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디터앤코퍼리셔(E&P)는 지난 1일 캘리포니아주 주의회가 지역 저널리즘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뉴스법(Community NEWS Act, AB 2222)’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언론인 고용 유지·신규 채용 모두 세액공제

이 법안은 지역 언론인을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언론사에 환급 가

능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안명의 ‘NEWS(Newsroom Employment and Workforce Sustainability)’는 지역 언론사가 기사를 계속 고용하고(Employment), 취재 인력(Workforce)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Sustainability)는 의미를 담고 있다.

크리스토퍼 워드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지난 2월 19일 처음 발의했으며 버피 워스 하원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또 비영리단체 ‘리빌드 로컬 뉴스(Rebuild Local News)’가 후원했다. ‘리빌드 로컬 뉴스’는 위기에 처한 미국의 지역 저널리즘을 살리기 위해 입법 지원,

지역 언론사 세액 공제 혜택
①첫 5명의 정규직 언론인 1인당 연간 2만 달러(한화 약 2,712만 원) 인건비 세액 공제
②추가 정규직 언론인 1인당 연간 1만 5,000달러(한화 약 2,034만 원) 세액 공제
③시간제 언론인 1인당 7,500달러(한화 약 1,017만 원) 세액 공제
④새롭게 고용한 정규직 언론인 1인당 추가 1만 5,000달러(한화 약 2,034만 원) 세액 공제
⑤신규 채용에 대한 세액 공제는 기존 고용 유지 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정책 제안, 언론 생태계 자금 지원 모델을 연구·추진하는 미국의 비영리 정책 단체다. 이 법안은 언론인을 고용하는 언론사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

종이신문·디지털·방송 등 폭넓게 적용

법 적용 대상은 종이신문, 디지털 뉴스 사이트, 민족·소수집단 대상 매체, 방송사 등 매체이며, 영리·비영리·공적으로 지원받는 언론사에

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자격 요건은 △소유 구조 공개 △정치행동위원회(PAC, 정치후원조직) 소유 금지 △방송사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 허가 △책임보험 가입 △정정보도 정책 공개 등이다. 또한 전체 독자의 최소 33%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한다.

대기업 고액 임원 급여 공제 폐지해 지원 재원 마련

지역언론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캘리포니아주 내 대기업이 연간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위 임원 급여의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해 마련했다. 이는 연방 세법의 개정 사항을 캘리포니아주 세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확보한 추가 주정부 세수를 지역 언론사의 세액 공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 세무위원회(Franchise Tax Board)는 세액 공제 규모를 첫째 1,900만 달러(한화 약 257억 원), 이듬해 4,300만 달러(한화 약 583억 원)로 추산했다. 대기업 임원의 100만 달러 초과 급여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 일반회계는 첫째 2,900만 달러(한화 약 392억 원), 이듬해 5,800만 달러(한화 약 784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AI가 기사 우선순위·위치 판단해 신문지면 자동 편집

세계신문협회(WAN-IFRA)는 지난 8월 25일 신문 제작 및 지면 편집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주요 미디어 솔루션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 기업은 스웨덴 미디어 소프트웨어 기업 아텍스(Atex), 크로아티아의 미디어 소프트웨어 기업 스토리에디터(StoryEditor), 이탈리아 미디어 콘텐츠 관리·편집 기업 이도스미디어(EidosMedia) 등 3 곳이다.

아텍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을 자동화할지 결정하기

아텍스의 AI 활용은 편집자가 기사 우선순위와 지면 게재 위치를 결정하면, 자동화 엔진이 나머지 지면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AI는 제한된 공

간에 맞춰 헤드라인을 조정하는 등 반복적인 제작 업무를 지원한다.

제임스 허시 제품 총괄은 “AI가 제안하고, 편집자가 결정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인쇄신문은 지면이 제한돼 있어 콘텐츠 본문 외에도 지면 배치, 표현 방식 등 언론사 고유의 편집 규칙을 AI가 학습·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범용 AI 모델에 의존하기보다 언론사 자체의 스타일 가이드와 제작 규칙을 AI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리에디터 완성도 높은 지면일 수록 자동화가 어려워져

스토리에디터는 AI가 지면 디자인

을 직접 생성하기보다 언론사의 디자인 방침이 반영된 템플릿과 스니펫(snippet, 미리 만들어 놓은 작은 콘텐츠·디자인 조각)을 활용해 지면을 자동으로 구성한다. AI는 기사 분량, 섹션, 이미지, 정보박스 등의 요소를 분석해 설정 조건에 맞춰 지면 템플릿을 자동으로 선택·배치한다.

마르코 마르케타 제품 개발 디렉터는 “자동화의 본래 목적은 사람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개입해야 하는 불필요한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도스미디어 보조에서 자율적인 지면 제작으로

이도스미디어는 편집자가 우선순위를 정한 기사를 바탕으로 AI가 전체 지면을 구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편집자는 기사 게재 여부와 주요 기사 선정 등 뉴스 가치와 편집 방향을 결정하고, AI는 기사 배치·분량 조정, 헤드라인·이미지 구성 등 지면 제작 실무를 자동으로 처리한다. 이도스미디어는 일반적인 템플릿을 적용하는 대신 해당 매체의 지면 아카이브와 과거 편집자들의 레이아웃 결정을 AI가 분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매체 고유의 시각적 정체성, 기사·이미지 배치 방식, 헤드라인 체계(hierarchy) 등을 반영한 지면을 자동으로 제작한다. 현재 이도스미디어의 시스템은 60개

이상의 매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매체가 2026년에 제작하는 지면은 4만 6,000개 이상으로, 이도스미디어 시스템을 통해 레이아웃 및 품질 확인에 투입하는 시간을 1만 2,000시간 이상 절감하게 된다.

자동화에 앞서 언론사가 바뀌어야 할 것

언론사는 기존의 수작업 중심 제작 환경에서 단순히 AI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자동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콘텐츠와 템플릿, 우선순위, 편집·제작 규칙 등을 체계화하고 구조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들 사례는 AI가 편집자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자가 내린 결정을 바탕으로 반복적인 제작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허브 미디어 될 것”

부산일보 창간 80주년 기념식



부산일보(발행인 손영신)는 지난 1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창간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손영신 발행인은 기념사에서 “지역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부울경의 새로운 가능성을 세계와 연결하는 허브

미디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빠르게 변화되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넓게 연결하되 지역의 목소리를 잃지 않겠다”며 “신뢰받는 언론, 지역민에게 필요한 언론,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언론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다가올 100년 향해 힘차게 도약하자”

중도일보 창간 75주년 기념식



중도일보(발행인 김원식)는 지난 1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창간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원식 발행인은 기념사에서 “임직원들의 변함없는 헌신과 열정 덕분에 오늘날의 중도일보가 있을 수 있었다”며 “이 시간 이 자리를 함께 하는 중도일보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올 100년을 향해

더욱 힘차게 도약하자”고 말했다. 유영돈 사장은 “중도일보가 중부권을 대표하는 최고의 정론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선배님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임직원들도 끊임없는 자기계발에 힘쓰며 중도일보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자”고 말했다.

회원사 동정

강원일보, ‘2026 강원여성발전포럼-지역을 잇는 여성 리더십’

강원일보(발행인 박진오)는 오는 28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2026 강원여성발전포럼-지역을 잇는 여성 리더십’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변화 속에서 여성 리더의 역할을 모색하고 분야별 여성 리더들의 공공적 리더십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인일보, ‘2026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경인일보(발행인 홍정표)는 오는 20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2026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코스는 △하프 △10km △5km이며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빌딩 숲과 친수 공간을 따라 진행된다. 송도는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도시로 달리기 초보자에게도 부담 없는 코스이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1만5천명이다.

서울경제, ‘한국건설부동산산업대상’

서울경제(발행인 손동영)는 오는 18일까지 ‘제4회 한국건설부동산산

업대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부문은 △대상(건축·개발·주택) △최우수상(스마트건설·주거혁신·주거경관·도시정비·상업용개발·고객만족) △특별공로상(모든 영역)이다.

전북일보, ‘독자 맞춤형 AI 추천기사 서비스’

전북일보(발행인 서창훈)는 오는 24일부터 독자 맞춤형 ‘AI 추천기사 서비스’를 시행한다. ‘AI 추천기사 서비스’는 방문자가 열람한 기사를 AI가 분석해 비슷한 내용의 뉴스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스템은 주제와 관심사별 AI 기사 추천 기능도 포함했으며 독자의 클릭과 검색 패턴까지 반영한다.

중부일보, ‘홍재청년문학상’ 공모

중부일보(발행인 최운정)는 수원문인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까지 ‘제3회 홍재청년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분야는 △시·시조(5편) △소설(200자 원고지 70매 이내 1편) △동화(200자 원고지 30매 이내 2편)이다. 시상은 △대상(1명 500만 원) △대상 장르를 제외한 각 부

문 본상(1명씩 100만 원)이다.

중앙일보, ‘하루 2시간 아끼는 AI 활용법 세미나’

중앙일보(발행인 박장희)는 오는 18일 섬유센터빌딩 컨퍼런스룸에서 ‘하루 2시간 아끼는 AI 활용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AI 활용 노하우 강연과 실습이 진행되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 팁을 소개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75명이며 참가비는 19만9천 원이다.

헤럴드경제, ‘헤럴드 기업포럼 2026’

헤럴드경제(발행인 최진영)는 오는 29일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헤럴드 기업포럼(HBF) 2026’을 개최한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포럼은 AI와 반도체 등 선도 경제로의 도약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정은승 삼성전자 고문 △이재욱 서울대학교 AI 연구원 원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한다. 이어 반도체, 퍼지컬 AI, 브랜딩, 우주산업을 주제로 4개의 세션이 진행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선다.

강원도민일보 지령 1만호 발행

강원도민일보가 지령 1만호 발행을 맞아 10일 춘천 스카이컨



벤션에서 기념식(사진)을 열었다. 1992년 창간 이후 34년 만이다. 김중석 발행인은 기념사에서 “창간

초심, 지령 1호의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도민과 독자를

위해 복무하는 언론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문협회보

발행인	박장희
편집인	정우현
제작	한국신문협회
발행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인쇄	삼아인쇄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등록번호	서울, 다50673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2026 제2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

사실을 넘어, 책임 있는 보도와 품격 있는 언론



[참여신청 QR]

2026. 10. 01 (목) 14:00 - 17: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문의 | 위원회 사무국 02-734-3081~3
www.ikpec.or.kr

발제1

AI 활용 관련 저널리즘 윤리 준칙과 실무 가이드라인
서수민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제2

기사형 광고 관련 언론 자율 심의 실효성 제고
허만섭 |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종합토론

좌장 심석태 |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

패널 이준웅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희원 | 한국일보 뉴스센터다실장

최성진 | 한겨레신문 미디어본부 영상국장

김선호 |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현창국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